

# 한전, 연장·휴일·야간 근로 할증노임 지급

### 13일부터 '노임의 할증 표준적용 제정(안)' 도입 적정 공사비 지급 위한 기준 마련 '큰 의미'

한전이 단가계약공사 시 주 40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에 할증노임을 지급한다. 전기공사 기술자의 휴일·야간 근로에 대한 노임에도 할증 기준이 적용된다. 전기공사업계에 따르면 한전은 최근 '노임의 할증 표준적용 제정(안)'을 마련하고 13일부터 본격적으로 도입할 계획이다.

한전은 이번 기준 제정을 통해 그동안 전기공사현장에 적용되지 않았던 평일 연장근로 할증노임을 단가계약공사에 한해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한전 관련 업무를 전면적으로 수행한 작업자가 평일 40시간 근무를 초과 수행했을 경우 연장근로 할증을 인정한다는 것.

기준에는 평일 40시간 근무를 한전 관련 업무로만 수행했다는 증명할 수 있는 길이 없었기 때문에 할증노임을 받지 못했다는 게 업계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와 관련 전기공사협회와 한전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주 40시간을 한전 업무만 전면 수행한 직원 임을 증명하는 자료 ▲한전 작업지시서 ▲표준근로 계약서 ▲4대보험가입 증명서 ▲임금지급내역서 등을 제출할 경우 연장근로를 인정해 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연장근로는 52시간 근로제도를 도입한 근로기준법에 따라 한 주에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한전은 또 전기공사 노임의 휴일·야간근로 할증을 적용하기로 하고 기준을 제정했다.

휴일근로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거한 휴일과 근로자의 날 등에 근무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적용된다. 토요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상 평일근무에 포함되기 때문에 연장근로 할증만 받을 수 있다.

한전은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고,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에는 100% 가산기로 했다.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를 야간근로로 지정하고, 일일 작업시간 총량과 관계없이 해당 시간대에 근로한 경우 할증노임을 적용한다. 연장근로와 중복될 경우 야간 50%, 연장

50%를 인정해 100% 가산되며, 휴일근로와 중복된 경우 8시간 이내 근로자는 100%, 8시간 초과 근로자는 150% 가산된 노임을 받게 된다.

휴일·주말근로 할증을 받기 위해서는 한전의 작업지시서와 임금지급내역서를 제출해야 한다. 아울러 모든 할증노임은 부작용을 막기 위해 한전이 지시한 공사일 경우에만 적용한다.

이번 연장근로와 휴일·야간근로에 대한 할증노임 기준이 마련되면서 전기공사업체의 인건비 부담이 한층 줄어들 것으로 업계는 기대했다.

그동안 휴일이거나 야간에 일한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할증된 임금을 줘야했지만, 한전에서는 관련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일반적인 노임만을 업체에 지급했기 때문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휴일과 야간, 연장근로의 노임 할증은 수년 전부터 업계가 요구했던 부분"이라며 "전기공사협회와 한전이 협력해 그동안 해소되지 못했던 근로 기준을 마련하고, 제대로 된 노임을 지급할 수 있는 기반을 닦았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윤대원 기자 ydw@

리를 통해 관광활성화 정책의 개선 및 관광지 골목상권 활성화 등에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부천시, 스마트기술로 미세먼지 저감한 쾌적한 환경 제공= 부천시는 '미세먼지 클린 특화단지' 사업을 제안했다.

빅데이터 분석과 미세먼지 저감서비스를 연계한 쾌적한 환경 만들기에 앞장선다는 목표다.

부천시는 시민생활권역별로 미세먼지 측정소를 설치, 신뢰성 있는 미세먼지 정보를 제공하기로 했다. 수집된 정보는 인공지능(AI) 기반의 분석을 통해 부천시에 적합한 미세먼지 대책 수립에 활용한다.

빅데이터 분석으로 부천시의 미세먼지 발생 특성을 파악하고, 이를 통해 미세먼지 발생을 사전에 예측해 시민들이 불편을 느끼기 전에 선제적인 저감 대책을 실시한다는 게 부천시의 계획이다.

구체적인 미세먼지 저감 서비스는 관내 레미콘공장 주변 및 도심 학교동학로, 지하철역 등 시민 관심 지역에 우선 실시한다. 빅데이터 시스템과 연계한 지능형 저감장치, 스마트 살수차 등도 활용할 예정이다.

윤대원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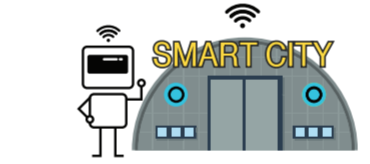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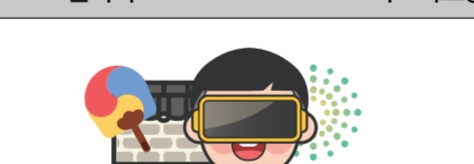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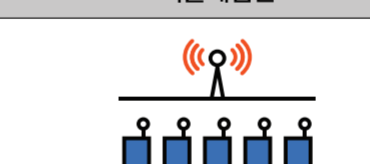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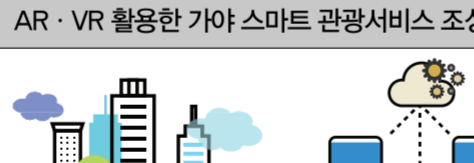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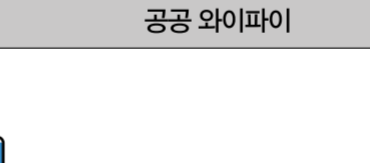
성한다. 투어 프로그램을 통해 시민들이 최신 4차 산업 기술을 체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연구기관 간 협력체계를 발전시켜 오픈플랫폼 형태의 통합관리 센터도 구축한다.

◆김해시, 가이문화 중심 역사도시 거듭난다= 김해시는 '고고(GO古) 가야 스마트 관광서비스' 조성 등 가이문화를 주제로 증강현실(AR)과 가상현실(VR)을 비롯해 홀로그램을 활용한 역사체험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스마트 모바일터를 구축해 관광객의 편의를 제공하는 등 새로운 지역 관광산업 발굴에 힘을 쏟는다는 계획이다.

사업대상지 전역에는 130여개의 공공와이파이가 설치된다. 관광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한편 공공와이파이 활용 정보를 분석하는 스마트서비스도 제안됐다.

관광지역별 유동인구 등 관련 정보의 체계적인 관

			
라이프	전기버스	스마트가로등	기술체험관
			
역사	AR·VR 활용한 가이 스마트 관광서비스 조성	공공 와이파이	
			
환경	미세먼지 클린 특화단지	미세먼지 빅데이터	

대전과 김해, 부천에 도입될 스마트서비스.

## 대전·김해·부천, 3色 스마트시티에 60억원 지원

### 국토부, 테마형 특화단지 조성사업 지원대상지 선정 생활·역사·환경 초점 맞춘 스마트시티 구축사업 추진

대전·김해·부천시가 국토부의 테마형 스마트도시로 선정된다.

7일 국토교통부는 '2019년 테마형 특화단지 조성사업' 지원 대상지로 대전광역시와 경남 김해시, 경기도 부천시 3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총 60억원의 국비가 지원되는 이번 사업은 기존 도시에 다양한 스마트 서비스를 적용해 교통·에너지·방범 등 생활편의를 개선하고 지역의 고우 산업·문화적 경쟁력을 강화해 스마트도시 우수사례 창출을 지원하는 것이다.

국토부는 지난해 종합계획을 수립한 지자체 가운데 우수사례를 3곳 선정해 조성비용을 지원하기로 했다. 지자체는 지원받는 국비와 동일한 규모로 지방비를 분담하게 된다.

테마형 스마트도시를 구축하는 데 총 120억원이 투입되는 셈이다.

이번에 선정된 지자체들은 지역 내 기성 시가지의 특성에 적합한 스마트도시 서비스 활용계획을 제시하고 있다는 게 국토부 측의 설명이다. 다양한 유형의 한국형 스마트도시 모델이 창출될 전망이다.

◆대전시, 친생활형 초점 맞춘 스마트 서비스 제공= 대전광역시는 노후된 대덕연구개발특구 일대를 중심으로 '친생활형 스마트 서비스'를 제공하는 '리뉴(Re-new) 과학마을' 조성을 추진할 예정이다.

우선 카이스트에서 개발한 무선충전 전기버스를 도입, 대중교통 노선을 신설할 예정이다. 또 냉난방은 물론 각종 편의시설을 적용한 버스쉼터도 설치한다.

탄동천 주변으로는 범죄예방 기능을 강화한 스마트가로등 등을 설치한다. 이를 통해 안전한 시민들의 쉼터를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연구기관 간 협력을 통해 6곳의 기술체험관을 조

## 도시재생혁신지구 활성화 제도적 기반 닦는다

### 윤관석 의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 개정안 2건 대표발의

도시재생 혁신지구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전망이다.



특례제한법' 등 개정안 2건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발의된 '도시재생 활성화 특별법 개정안'에서 정의된 혁신지구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연계입법사항이라는 게 윤 의원의 설명이다.

혁신지구 재생사업은 쇠퇴한 구 도심지역을 다시 활성화하기 위해 지역의 성장 잠재력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지역별 특성에 맞는 산업, 상업, 주거, 복지, 행정 등의 주요 기능을 부여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도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거점을 조기에 조성,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의 도시재생을 촉진하고자 하는 사업이다.

윤 의원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해 혁신지구 재생사업 추진시 협의 매수 등의 방법으로 토지를 수용·사용 방식도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또 '국유재산특별제한법' 개정안에서는 도시재생사업과 혁신지구재생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도시재생사업 시행자와 혁신지구사업시행자에 대해 사용자 또는 대부료의 감면이 가능하고, 사용자 및 대부기간을 20년 이내로 할 수 있

도록 했다.

윤 의원은 "지난해 발의된 '도시재생 활성화 특별법'과 이번에 발의된 2건의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돼 문재인 정부의 도시재생뉴딜이 성공적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주민이 체감 가능한 지역의 활성화, 관련 일자리의 창출, 재생사업의 신속한 추진이라는 세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시재생활성화 특별법 개정안에는 윤관석, 이학영, 김영진, 윤후덕, 안규백, 금태섭, 권철승, 이원욱, 강훈식, 송영길, 이재정, 전현희, 박찬대 의원 등 13인이 공동으로 이름을 올렸다.

윤대원 기자

국토교통부 김현미 장관의 숙박영수증이 논란거리다. 김 장관은 국토교통부 예외규정을 이유로 총 5회를 다녀온 해외 출장시 숙박영수증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예외규정은 신용카드가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된다. 신용카드가 보편화된 현실에서 김 장관이 영수증을 제출하지 않은 것은 납득하기 쉽지 않다. 도대체 무슨 사연이 있을까.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왜 숙박영수증을 제출하지 않나!

### 할인정책, 신용카드 사용 불가지역 적용되는 예외조항 김현미 장관은 숙박 영수증 단 한차례도 제출한적 없어



장관 개인 계좌에 선입금 된다.

안일규 부산경실련 팀장은 "할인정책은 신용카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사진)이 국외출장 비용정산과정에서 숙박 관련 영수증을 제출하지 않아 호텔명뿐만 아니라 정확한 숙박비용을 알 수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 장관은 외교부 주관 국외출장을 제외하고 취임 후 국외출장을 5회 갔으며 이 중에는 숙박비만 250만원에 달하는 6박 8일 유럽 출장도 있었다. 250만원 상당의 큰 지출임에도 영수증 증빙이 면제되는 이유는 공무원여비규정에 따른 할인정책 제도 때문이다.

할인정책에 따르면 지역별 숙박 상한액의 85% 청구 시 소비정산을 면제받을 수 있다. 인사혁신처 관계자에 따르면 할인정책의 취지는 신용카드 사용이 불가능한 해외 호텔에 투숙했을 때를 전제로 만들어진 제도다. 그런데 1박에 40만원이 넘는 독일과 오스트리아의 호텔에서 과연 신용카드 사용이 불가능했을까 하는 점이 다. 김 장관은 이번뿐 아니라 국외출장에서 단 한번도 숙박영수증을 제출하지 않았다. 예외 규정이 원칙이 된 것이다.

국내출장에서 3급 과장 이하 공무원은 서울의 경우 7만원, 광역시 6만원, 기타 지역 5만원을 상한으로 그 미만의 경우일지라도 영수증을 제출해야 하는 것과 차이가 난다. 국내출장에서는 차액을 유용할 여지가 없는 반면 국외출장에서는 차액을 유용할 여지가 있는 것이다. 이런 의심이 드는 이유는 김 장관의 숙박료가 할인정책의 최상한인 85%라는 것이다. 신용카드 가능 지역인데 85% 이상이라면 신용카드로 결제했을 것이고 그 미만이려면 차액이 발생했을 것이라는 추측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더구나 하루 60달러의 일비와 136달러의 식비도 영수증 없이 지급될 수 있다는 것을 가정하면 국외출장 때마다 상당한 금액이 현금으로

드 사용이 안 되는 협지를 위한 제도인데 이를 악용해 상한선의 85%를 현금으로 받고 차액은 챙기게끔 잘못 운영되고 있는지 전수조사해 신용카드 사용이 되는 곳이라면 할인정책을 폐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개인적 금전적 이득이 될 우려가 있는 출장비 선입금 제도는 과거 공무원 급여가 박봉이고 신용카드가 활성화되지 못했을 때 생긴 제도로 민간처럼 사후 정산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최동길 NPO 대표는 "이전에 정보공개청구를 했을 때 서울시장은 호텔명과 호텔 주소 등을 공개했기 때문에 국토부 장관의 호텔명 정보 공개 거절은 타당하지 않다"고 말했다. "민간에서는 법인카드를 사용하거나 법인카드가 없는 경우 개인카드를 사용하고 사후 정산하는데 공무원 국외 출장 여비는 출장 전에 현금으로 먼저 지급받는 데 근본적인 문제점이 있다"고 말했다. "일정 변경으로 여비가 남는 경우 등 현실에서 발생가능한 문제점을 고려했을 때, 사전에 현금으로 지급하기보다는 해외 출장 전용 법인카드 사용을 지방정부에 제안한 바 있었으나, 해당 지방정부에서는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 "현금으로 출장비를 지급하니 최근 논란이 된 일부 공직자의 스트립바 출입 등이 문제가 되는 것"이라며 "해외출장에서 여행 경비의 투명성 집행을 위해서 현행 가능 지역인데 85% 이상이라면 신용카드로 결제했을 것이고 그 미만이려면 차액이 발생했을 것이라는 추측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더구나 하루 60달러의 일비와 136달러의 식비도 영수증 없이 지급될 수 있다는 것을 가정하면 국외출장 때마다 상당한 금액이 현금으로

윤재현 기자 mahler@

## 건설기술 품질 향상 용역 심사기준 개정

### 1H, 3월부터 기술용역 낙찰하한율 인상으로 적정대가 지급 보장

1H는 건설기술용역의 품질 확보를 위해 기술용역 낙찰하한율 인상을 주요 골자로 하는 용역적격심사기준 개정을 완료했다.

용역적격심사는 용역 입찰 시 용역 수행능력과 입찰가격을 평가해 낙찰자를 결정하기 위해 진행되며, 이번 개정은 기술용역을 수행하는 업체에 적정 수준의 대가를 보장함으로써 용역의 품질을 향상하기 위해 추진됐다.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기존에 통합돼 관리되던 일반용역과 기술용역의 심사기준을 분리해 설계·감리 등 기술용역의 특성에 맞는 심사기준을 마련했다.

또한, 기존에는 기술용역의 규모에 관계없이 용역수행능력과 입찰가격

을 평가한 종합점수가 85점 이상이면 적격심사를 통과할 수 있었으나, 기준이 개정되면서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용역은 92점, 10억원 미만인 용역은 95점으로 통과기준이 상향됐다.

1H는 이를 통해 더 우수한 역량을 갖춘 업체가 용역을 수행하게 돼 품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용역규모에 따른 낙찰하한율 또한 개정됐다. 추정가격 10억원 이상 용역의 낙찰하한율은 79.995%, 5억원 이상~10억원 미만은 85.495%, 2억원 이상~5억원 미만은 86.745%, 고시금액인 2억원 미만은 87.745%로 각각 4.75~12.5%p 상향됐다.

윤재현 기자